

Vol.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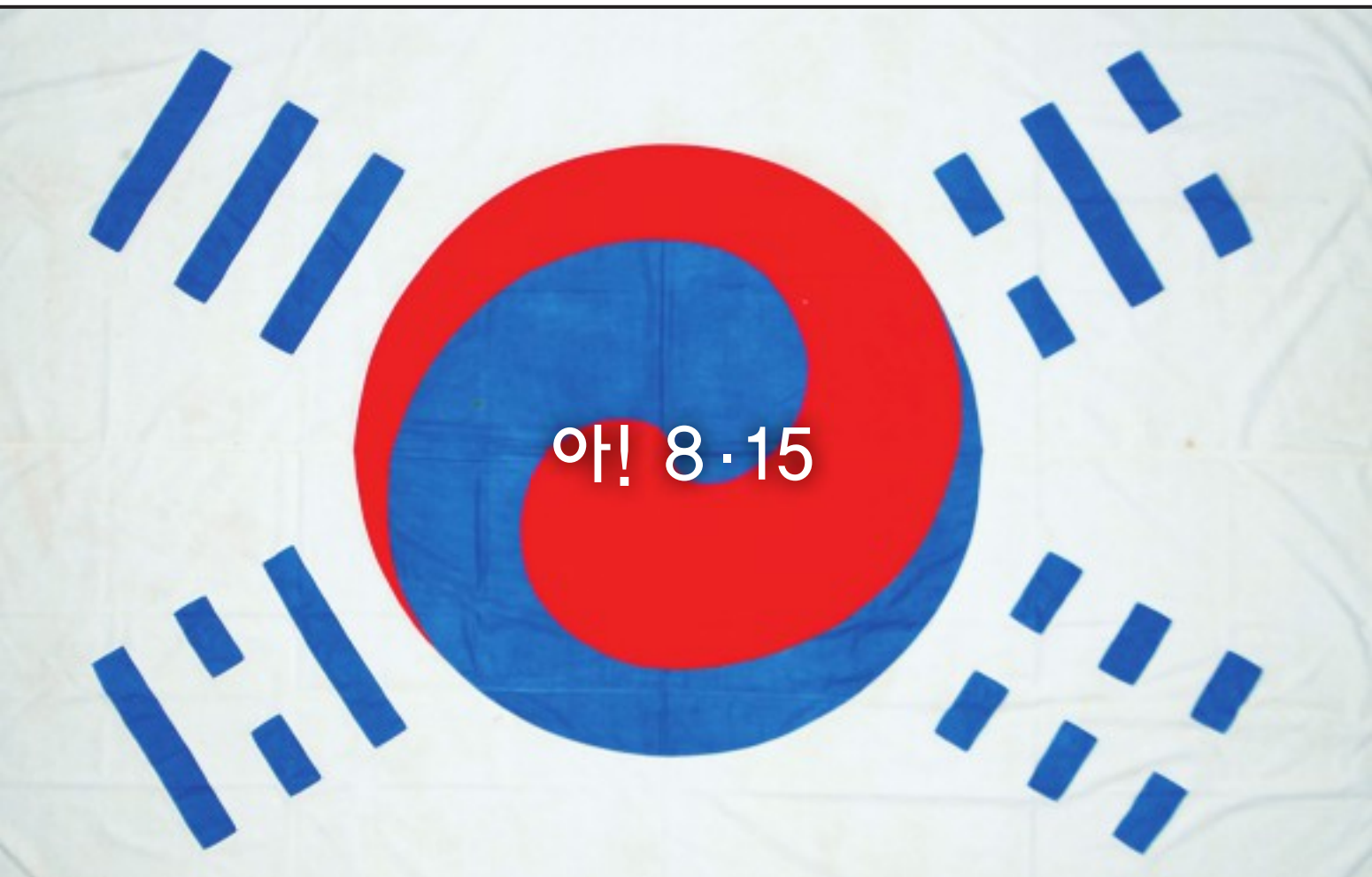
2021. 08.16-22

공감



gonggam.korea.kr
스캔하면 <공감> 누리집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특집** 문재인 케어 4년, 포용적 복지_20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사회로_42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사회·국민 모두 선진국 주체 되려면_10
 소부장 자립의 길 2년, 으뜸 기업을 가다 ❶ 무선주파수 필터 국산화 '이랑텍'_46 노메달·꿀찌도 관찮아, 축제가 된 '모두의 올림픽'_50 —

산사태!

대비하면 **안심**

방심하면 **재난**

작은 관심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려면...



집주변의 산사태위험 점검

배수로를 확인하고 잡목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기상 및 산사태 정보 확인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한다.



대피장소 확인

대피소와 비상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구조요청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산사태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119로 연락해주세요.

정부의산
보다나온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나’에게서 벗어나기

● 김병수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몇 권의 책을 쓴 저자.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교대역
작은 의원에서 사람들의 상처 난 마음을 잇고 있다.



우울하면 생각의 초점이 자신에게 모아진다. 자기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의 특징적인 사고 습관이기도 하다. ‘우울증 때문에 앞으로 나는 아무 일도 못 할 거야!’라고 속으로 곱씹고 ‘난 정말 우울해,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힘들어!’라며 감정에만 파고드는 것이다. ‘나는 왜 우울증에 걸렸나?’ 하고 자기 안에서 원인을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이들은 그 기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나에게 집착할수록 우울감은 더 커진다.

우울할수록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더 자주 쓴다.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우울증 환자의 언어 습관을 관찰해보니 그랬다. 마음이 아프니까 나를 주어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보다 “내가… 나는… 나를”이라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우울증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우울의 심도가 깊을수록 그 사람의 말이나 글에서 나라는 표현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참고로 분노에 찬 사람은 ‘나’보다 ‘너’ ‘당신’ 같은 이인칭이나 ‘그녀’ 또는 ‘그(들)’처럼 삼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쓴다. 화가 나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를 열 받게 한 대상에게 생각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흐르는 방향을 감정이 꺾어놓는 것이다.

병이 났거나 통증이 심해져도 나를 더 사용한다. 신경이 온통 자신에게 모아지기 때문이다. 비록 연구 대상자 수가 적지만 자살한 시인 아홉 명과 그렇지 않은 아홉 명의 시를 분석한 결과를 봤더니 부정적 감정 단어는 두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나’라는 표현은 자살한 시인들의 작품에서 훨씬 흔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나뻐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라고 하면 좋은 추억을 회상할 때보다 나라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더 자주 사용한

다.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힘든 건 내가 그때 잘 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라며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생각 습관을 반추라고 한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해결책을 찾는 건 반성이다. 지나간 잘못만 곱씹으면 반추다. 반추는 하면 할수록 우울해진다. 우리는 종종 반추를 반성이라 착각한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면 일인칭 단수 대명사를 덜 쓴다. 관심의 범위가 가족과 친구, 주변의 사물과 공간,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미지의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에 몰두해도 그렇다.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느라 나에게 덜 신경 쓴다. 마음을 괴롭히던 문제에만 집착했던 환자가 치료가 잘돼 회복하면 “지금까지 고민했던 내 안의 문제들이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목표라는 걸 깨달았다.

생각이 온통 나에게 쏠린다면 ‘아, 내 감정 상태가 우울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진짜 중요한 일은 뭐지?’라고 관점을 옮겨보자. 글쓰기 숙제를 해결하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운동을 하고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행위를 통해 나에게 모아졌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 우울한 기분도 서서히 걷힐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혜

그대의 나일
어떤 기쁨이
그리고 있나





공감

훈민정음체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제호입니다.

Vol. 617
2021. 08.16~22

김병수의 마음 탐구

01 '나'에게서 벗어나기

02 공감 글판

힘내라 대한민국

06 "코로나19 백신 자금 첫걸음"... 국내 개발 백신 임상 3상 승인

08 "보건 안보+전 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 기여"

특별기획 시리즈_ 선진국, 대한민국 ⑤ 끝

10 "정부·사회·국민 모두 선진국 주체 되려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연대의식 갖춰야"

내게 힘이 되는 추경 ①

상생 '국민·소비' 지원금

14 위기에 더 빛난 추경, 힘이 돼준 재난지원금

국정종합

18 "대상포진 백신 접종 국비 지원 등 열린 자세로 검토"

특집_ 문재인 케어 4년, 포용적 복지

22 3700만명이 3년간 9.2조원 의료비 덕봤다

24 소득·돌봄·의료 보장 빈곤 맞서 포용적 복지

28 1회 310만원 폐암 치료비가 14만원으로
"부담 없이 치료 전념... 날 지켜준 건강보험"

32 공공병원 존재의 이유

표 지 이 야 기

아! 8·15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만든 태극기와 광복군 유물 등 항일독립운동사 유산들이 대거 국가보물과 근대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8월 12일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1880년대의 '데니 태극기'와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진관사 태극기', 1941년 애국지사 백범 김구가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를 적은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국가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 밖에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메달'과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는 이날 문화재 등록이 확정됐다.





62

문재인정부 4년_ 내게 찾아온 변화 ⑩

포용적 복지-안전망 강화

- 34 “코로나19 위기 속 미래 준비 여유 생겨
사회 안전망 튼튼하게 받쳐주는 나라로”

홍화정 만화_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⑫

- 38 ‘용기’를 챙겨가는 장보기

2050 탄소중립

- 40 “미래 세대 생존권 위해 온 국민 동참을”
42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사회로

소부장 자립 2년, 으뜸 기업을 가다 ①

2020년 소부장 스타트업 100 선정 ‘이랑텍’

- 46 ‘모두에 이로운 기술’ 무기로 일본에 역수출

2020 도쿄올림픽

- 50 노메달·꼴찌도 괜찮아, 축제가 된 ‘모두의 올림픽’

내 삶을 바꾸는 정책

- 54 일상 속 정보 보호 강화 ‘눈에 띄네’

내 삶을 빛내는 문화

- 56 태극기 세 점 국가보물 된다

연재_ 한반도 평화 ④

- 58 한미연합훈련의 묘수

연재_ 박인권의 ‘명화 다시 보기’ ⑤

폴 세잔 ‘생트 빅투아르 산’

- 60 색과 형태는 한몸… 그림으로 진리 일깨워

60



연재_ 신한류 돌보기 ②

- 62 BTS의 음악은 한국적인가?

- 64 참여공감

발행일	2021. 08. 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황희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팩컴코리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자급 첫걸음” 국내 개발 제품 임상 3상 승인

정부 대책 종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막바지 개발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상 임상시험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등 국내 14개 기관과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시험대상자는 모두 3990명으로, 시험백신은 3000명, 대조백신은 990명에게 0.5ml씩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2022년 1분기에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 신청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승인한 3상 임상시험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다. 3상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허가돼 예방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백신으로 사용해 시험백신 효과를 확인하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1월 26일 식약처로부터 GBP510에 대한 1·2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됐고 이어 240명을 대상으로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1상 중간 분석 결과 유효성 면에서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중화항체가 생성됐고 완치자 혈청인 국제표준혈청 패널 대비 다섯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완치자 혈청 대비 다섯 배 높은 중화항체

안전성 측면에선 백신 접종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사 부위 통증이나 근육통, 두통 외에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8월 9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외부 임상전문가 자

문회의에서 3상 비교임상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는 임상 2상을 완료해야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한 면이 있고 1상 결과에서 충분히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1상 결과로도 3상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 검토 회의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이다. 표면항원 단백질을 투여하면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하며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앞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승인은 국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교 임상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향후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핫라인 운영

박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일선 응급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활용해 적절한 병상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을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8억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했다. 2020년 12월에는 수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 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 방안을 추진한다.

8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소방대원들이 폭염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진료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어 2021년 2월에는 감염병(의심)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변경·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 및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 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 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 방안을 추진한다.

고속국도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박항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의 화성, 영동선의 용인휴게소 등 고속국도 상행선 휴게소 4개소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급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고속국도의 통행량도 함께 늘어났다. 특히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통행량은 일 평균 480만 7000대로 나타났으며 7월 30일에는 531만 대로 하계 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노선의 휴게소 중에 위치와 설치 공간 확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총 네 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형태는 대기 차량으로 인한 고속국도 본선의 지연·정체 등 교통안전에 고려해 차량 이동형 검진(드라이브 스루) 대신 천막·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시설로 설치된다. 또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휴게소 내 일반 이용객들과 동선을 분리한다. 폭염 등 기상 상황의 변동과 검사 인원이 급증하는 경우 세부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 총괄반장은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후 진단됐을 경우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등 후속절차를 수행한다”며 “임시선별검사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정연 기자

“보건 안보+전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 기여”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정부가 2025년까지 백신 세계 5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한 것은 국내의 우수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전 세계 백신 생산 기지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국내 공급을 넘어 전 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잦아지는 등 글로벌 백신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장기화 하면서 자국 내 백신 생산 여부는 보건 안보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백신 5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미국·영국·러시아·중국에 이어 5번째로 코로나19 상용 백신 개발국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2020년 세계 9위에 머물고 있는 백신시장 점유율을 2025년에는 세계 5위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전세계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기여하고 의약품 수출도 2025년 364억 달러(2020년 84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대량자료(빅데이터) 기업인 ‘아이큐비아’는 2015년 167억 달러였던 글로벌 백신시장 규모가 2019년 228억 달러로 8.1% 성장했고 2028년에는 10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백신이지만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 보급의 국가별 격차가 심각하다”며 “문제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숙련된 인적자원 보유, 개발역량 높아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은 높다. 국내 백신 생산능력은 2021년 12억 회 접종분(회분)에 이르며 2022년에는 17억 회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숙련된 노동자가 있고 원부자재 개발역량도 높다. 반면 바이오 기술력은 미국의 75% 수준으로 여전히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미국이 58.5%인 데 반해 1.5%에 그친다. 국내 예방접종 백신 28종 중 14종 만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 해외의존이 높은 것도 보완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화이자 등 다양한 백신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제약사의 사정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최소 1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백신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미국·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이기주의도 배제할 수 없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호흡기 질환인 사스가 2002년 발병한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 백신이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2022년 상반기 개발 완료와 상용화’라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했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추진단장은 “백신 개발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지만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은 높다.

국내 백신 생산능력은 2021년 12억 회 접종분(회분)에 이르며 2022년에는 17억 회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숙련된 노동자가 있고 원부자재 개발역량도 높다.



경기 성남시 소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 모습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GBP510의 임상 3상 승인과 관련해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차 추경 720억 원 활용 백신 선구매

국내에는 현재 7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유비아이오로지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합성 항원 방식으로 임상 2상 중이며 12월에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은 DNA 기반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이며 셀리드·큐라티스·HK이노엔도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이 기업들은 국내에선 코로나19 환자가 적어 3상 시험을 외국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667억 원을 임상 3상에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20억 원을 활용해 개발 성공이 예상되는 백신을 선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1조 원 규모의 임상시험 정책 펀드도 2022년에 조성된다.

정부는 국산 1호 백신개발을 위해 임상 3상 전에는 승인가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임상 3상 후에는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임상 승인가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절반으로 단축하고 그동안 기관별로 임상시험심사를 받던 것을 다기관통합심사로 개선함으로써 심사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또 국가 주도의 검체분석 지

원을 통해 민간의 부족한 검체 분석 역량을 보완한다. 일반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임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등 각종 참여유인도 제공하고 있다.

백신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미간 수요-공급 기업 연계 등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기업간 접촉·협력을 지원한다. 미국 외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과 협력도 강화해 국가간 협력파트너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은 국내 기술력이 부족해 이른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선 큐라티스가 임상 1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 한국핵신의약품컨소시엄은 6월 mRNA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과 특허 분석과 회피 전략 수립을 함께하고 세계 협력 강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월 말부터 모더나 엠아르엔에이 백신의 완제품 시생산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민관합동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정부·사회·국민 모두 선진국 주체 되려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연대의식 갖춰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 인터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7월 2일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국민적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위 격상은 급성장한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와 외교 등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됐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위 변경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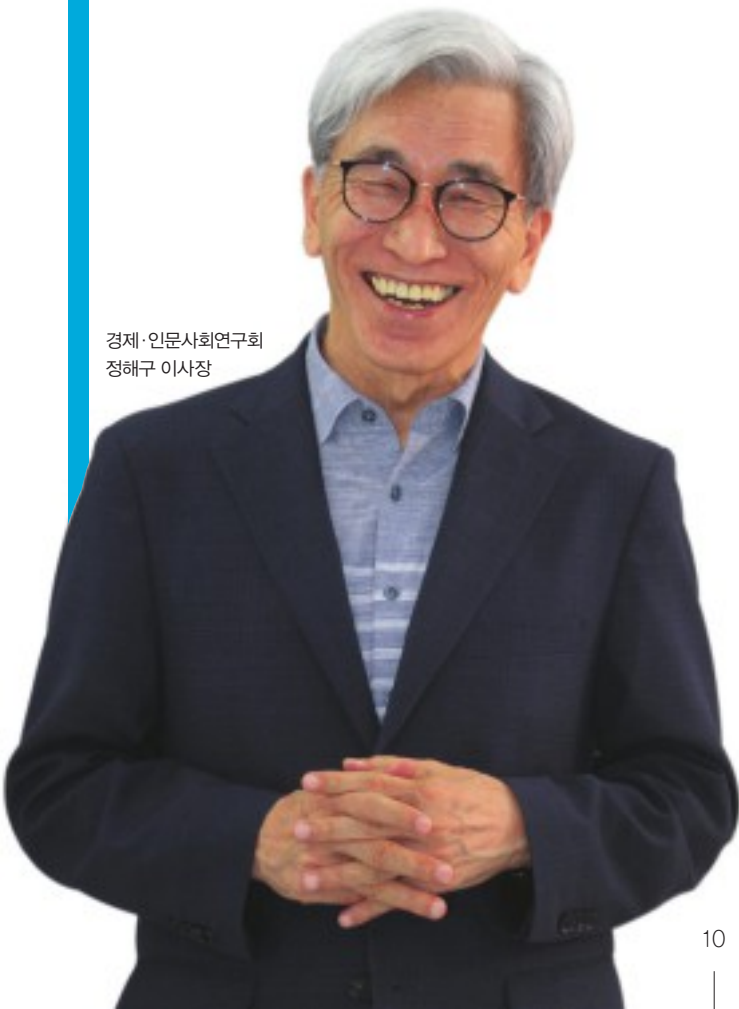
선진국 지위 격상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정립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 개도국에 대한 경제 지원과 협력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도 더 많이 요구받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얻는 유·무형적 혜택과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의 질이 경제·사회적으로 두루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바야흐로 선진국의 길로 접어든 대한민국. 그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 정립과 국제적 책임 및 역할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1964년 이 기구가 창설된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미국·영국·독일 등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 B에 속한 나라는 32개국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2020년 세계 10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GNI)은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번 UNCTAD의 결정으로 유엔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됐으며 우리 스스로 선진국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7월 30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만나 선진국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국책 연구기관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이과에 해당한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과라고 볼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 면에서 상황에 따라 우리가 더 앞서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민은 공동체 전체 위해 협조

정해구 이사장은 UNCTAD의 결정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6·25전쟁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가장 강한 이미지였을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디지털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대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미국·영국 등에 대우받는 모습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UNCTAD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도국 위치에 있지 말고 선진국 그룹에서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시민의식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국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열심히 협조해야겠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며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쓸 때도 내가 병에 걸린다는 생각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더 컸

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늘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 면에서 상황에 따라 우리가 더 앞서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사는 연대의식 필요

그러나 정 이사장은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은 명확한 개념이 따로 있다기보다 역사적으로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먼저 발전했던 나라들을 통상 의미한다. 경제 부문뿐 아니라 삶의 질 문제, 문화·정치 측면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최상위 국가들을 의



8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 반응 관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한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못 미친다”며 “양적인 측면에선 선진국을 따라잡았지만 질적인 측면, 개인의 삶의 질은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빈부 격차 속에서 사회 약자들의 삶의 질은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조금은 거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1년 사망자가 30만 명 정도인데 그중 자살하는 사람은 1만 4000명에 가깝다. 다시 말해 30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의미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며 “우리 사회가 빠르게 양적 성장을 하다 보니 여전히 거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제기되는 우리 사회의 공정·정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 갈등이 많다”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선진국이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격차를 감소하고 경쟁을 줄여줘야 한다. 무엇

보다 정부·사회·국민 모두가 명실상부 선진국 주체가 되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잘살 수 있도록 공동체나 연대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서울을 중심으로 초집중화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현상과 교육이 학벌로 변질되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은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기반인 동시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교육이 학벌이라는 신분을 얻는 수단이 되면서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주도권을 쥔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전쟁, 이후 미·중·일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생각했지만 이제 좀 더 당당하게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강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약소국의 조그만 나라가 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 청와대

니고 선진국들이 주시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일종의 기회"라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당당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에 오른 국가로 대외정책의 목표나 가치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강대국들의 대외정책은 자기 힘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약소국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평화·공동번영 등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목표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목표"라며 "우리나라는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대외정책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가지면서 인류 보편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외정책에서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사람(People)·평화(Peace)·공동번영(Prosperity)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끝나면 한번 더 도약 계기

정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임시직·일용직·프리랜서 등을 안타까워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 회복과 앞선 디지털 전환 등이 다른 나라에 앞서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또 북방외교 측면에서 가능성도 열어놴다. "10년 또는 20년 뒤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북관계가 잘 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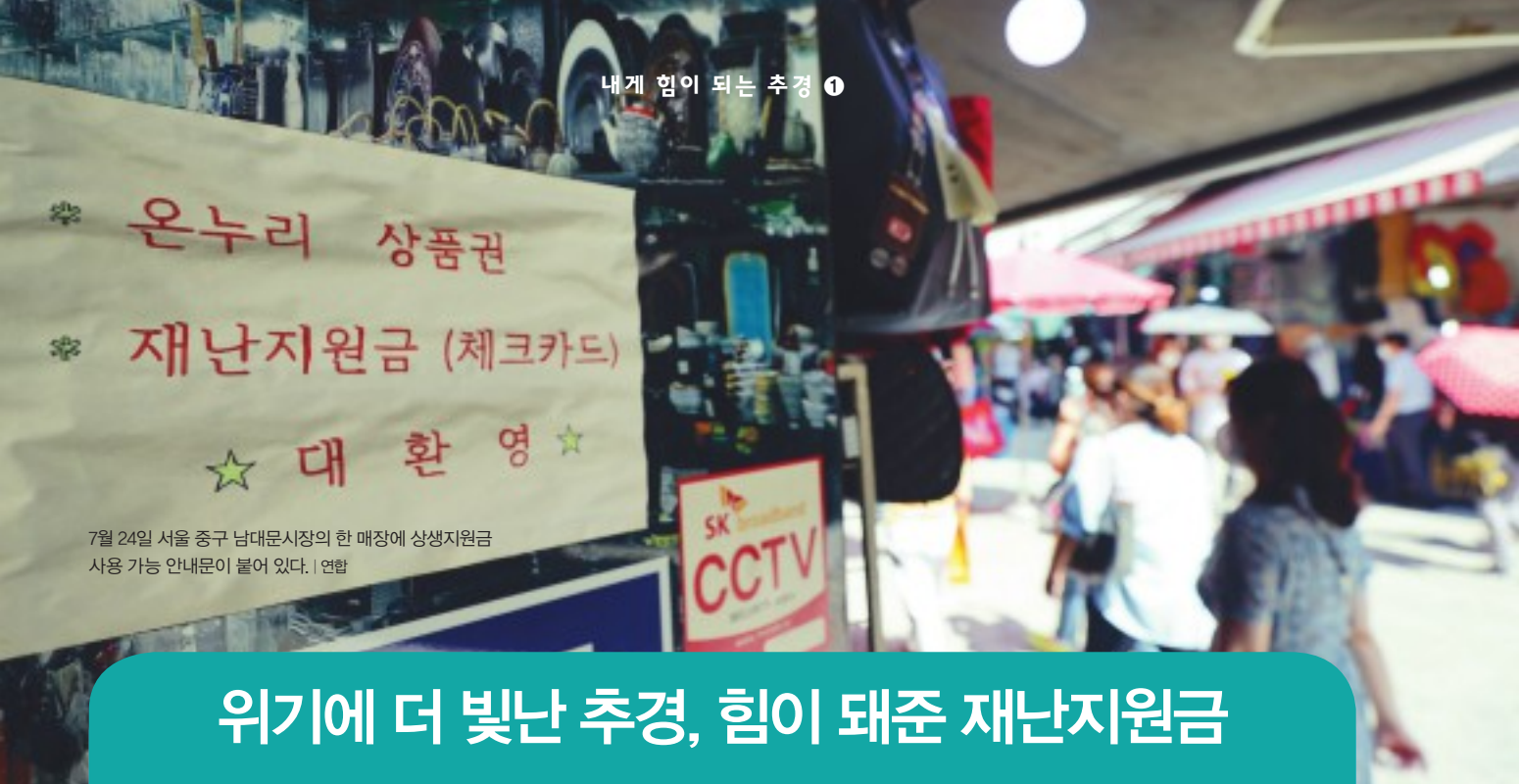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과 앞선 디지털 전환 등이 다른 나라에 앞서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유라시아(유럽+아시아) 측과 연결되면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철도 등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을 이루면 2050년에는 세계 5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정해구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문제, 4차 산업혁명 추진과 그것이 초래할 급격한 변화의 문제, 인류 생존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환경문제, 미중 간 패권 경쟁을 비롯한 국제 질서의 급속한 변화 등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속 연구기관은 이런 전환기에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글 이찬영 기자, 사진 권윤섭 기자



7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매장에 상생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위기에 더 빛난 추경, 힘이 돼준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소비' 지원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이 또 지급된다. 국민 88%에게 1인당 상생국민지원금 25만 원씩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로 소비 유도를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마주했을까?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가게에 숨통이 트이자 소비시장도 차츰 활력을 되찾았다. 재난지원금이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움직여 동네 상권도 되살아난 것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 매출이 증가하면 기업 생산도 늘어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된 셈이다. 코로나19 시대 상생을 위한 국민지원금과 소비지원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1인, 2인, 3인 가구를 각각 만나 물어봤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1인당 25만 원 지급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단위: 원)

가구원 수	직장	지역	혼합
1인(특례)	143,900	136,3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이상	634,400	661,800	861,600

※ 고액 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2021년 2차 추경 코로나19 상생국민·소비지원금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11조

1인당 25만 원 지급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맞벌이·1인이 가구 선정 기준 완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0.3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②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0.7조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사용액의 10%를 환급

#3인 가구 직장인
“힘들고 답답한데
작은 위로가
되기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들 힘들고 답답한데 작은 위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금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직접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니 한푼이 급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직장인 양동명 씨(49)는 2020년 봄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나와 이웃에 힘이 됐다고 기억했다. 세 식구인 양 씨 가족이 받았던 재난지원금은 80만 원이다. 양 씨는 “살림에 큰 보탬은 아니었어도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분명했다”며 재난지원금이 보여준 효과를 이야기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자영업자 같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자녀도 있어 고민 끝에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식비에 사용했습니다. 주로 배달을 통해 주문했죠.”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 1년 6개월, 양 씨는 일과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활동부족, 운동부족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또 회사의 매출도 줄고 영업에도 지장이 생기면서 상여나 급여인상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아들의 사교육비가 더 늘었고 외식비(배달음식)와 에어컨 사용 증가에 따른 기타 생활비 등이 현저하게 늘어나 날로 팍팍해지는 현실을 토로했다.

상생국민지원금을 양 씨가 반기는 이유다. 그는 “회사의 사정으로 추석 상여 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라며 “추석 전에 지급되면 이번에도 추석에 찾아뵙지 못할 부모님께 더 비싼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활용해 가능하다면 부모님 덕에 김치냉장고나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교체해 드리고 싶다”며 바람도 전했다.

특정 기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 역시 반겼다.

“결과적으로 캐시백을 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집안의 전자제품을 교체하는 수요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들 힘들고 답답한데 작은 위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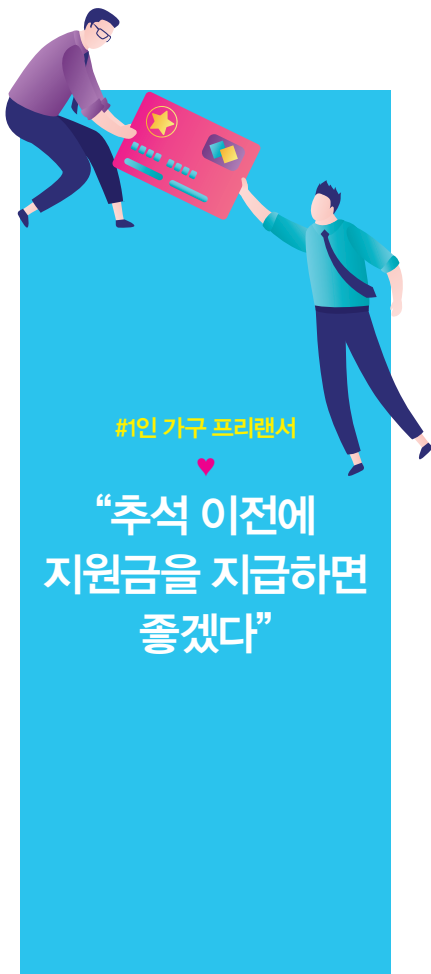
그것이 세금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직접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니

한푼이 급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1 2020년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2 경기도 고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발급한 선불카드 | 한겨레



“코로나19 이전에도 워낙에 벌이가 적었어요. 소득의 변화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저 같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이었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이용철(56) 씨는 ‘보통의 프리랜서’다. 매체 몇 군데에 글을 쓰고 영화제 몇 군데서 심사를 하고 가끔씩 강연을 하며 먹고 산다. 2020년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이 씨에게 폭염을 식혀주는 소나기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의료비나 식비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했다”며 지원금이 주는 효과를 설명했다.

이 씨가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의 약 88%에 선별 지원하는 결정에 적극 공감하는 이유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추석을 앞두고 아무래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때”라며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당초 정부 계획대로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워낙에 벌이가 적었어요. 소득의 변화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저 같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이었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2인 가구 맞벌이 “무너져가는 자영업 일으키는데 도움”



“정서적인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던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져가는 자영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에 사는 맞벌이 정민아(51) 씨는 난생 처음 받은 재난지원금이 대기업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자영업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말한다. 그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동네 작은 가게들 중심으로 1차 지원금을 사용했다. 정 씨는 “두텁게 선별지원”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했다.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최상위층을 제외하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세금 상승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발생할 요인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정 씨는 이번에 받는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놓았다.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비로 다 쓸 예정이에요. 그러려면 추석 연휴에 쓸 수 있게 미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심은하 기자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알아보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사용처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까지 1인당 25만 원씩 받는다. 상한을 폐지하고 가구 수대로 비례지급한다. (구성원 수×25만원)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선정기준표를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가 14만 39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고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만 2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사용 달라진 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간단히 생각하면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

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말부터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 줄서기 등 여러 불편을 줄이고 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상생소비지원금 환급액과 사용처는?

=카드 사용을 2분기보다 3% 넘게 사용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돌려준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영업점에서만 사용이 유효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어린이병원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월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어린이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보라”고 덧붙였다.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감염 확산 분기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1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기자 국민의 방역 협조를 당부하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국민의 희생적

“대상포진 백신 접종 | 국비 지원 등 | 열린 자세로 검토”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돼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써 건강보험료

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환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 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가면서 동시에 백신 예방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더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뉘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자 배구팀에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꼈다”

문 대통령이 객관적인 전력이 뒤처진다는 평가 속에서도 선전을 거듭하며 2020 도쿄올림픽 4위에 오른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격려했다. 그동안 금·은·동 등 메달을 따지 않은 선수들을 향해서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이번 배구팀의 활약은 “한 선수 한 선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8월 8일 여자 배구 3~4위 결정전이 끝난 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서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고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원팀의 힘으로 세계 강호들과 대등하게 맞섰고 매 경기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에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아쉬워하지 말기 바란다. 또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처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한 선수 한 선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는 응원으로 함께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김연경, 김수지, 김희진, 박은진, 박정아, 안혜진, 양효진, 염혜선, 오지영, 이소영, 정지윤, 표승주.” 문 대통령은 “덕분에 국민은 많은 용기를 얻었다”면서 “우리의 자랑 열두 선수의 이름을 국민과 함께 불러주고 싶다”고 했다. ●

이찬영 기자

문재인 케어 4년

보장 쏙, 부담 뚝 포용적 복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민의 안전은 한층 더 보호받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강화됐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총 3700만 명에게 약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2018년 1월~2020년 10월)이 돌아갔다. 지속적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64.7%였다. 특히 공공의료 기관 보장률은 71.4%로 민간의료기관의 66.0%보다 높았고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 기관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 통합을 실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4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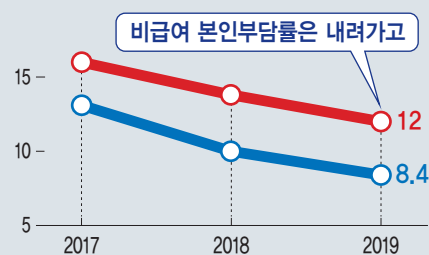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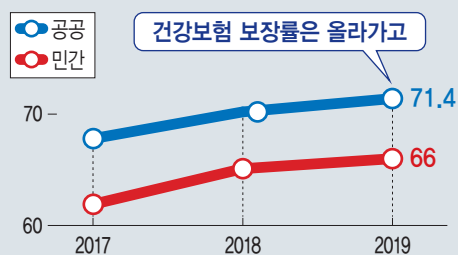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2020년 12월) 자료: 국민건강보험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3700만명이 3년간 9.2조원 의료비 덕봤다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4년 성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3년간 우리 국민 3700만 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 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69.5%로 상승

정부는 보장성 대책의 일환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보장성 대책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10~20%에서 5%로 낮아졌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21~42%에서 5~20%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인하됐다.

아울러 충치치료와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었다.

장애인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와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또한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

이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버팀목 역할 수행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6월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해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와 응급응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000억 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 항목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면서 특히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1년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저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박순빈 기자



소득·돌봄·의료 보장 빈곤 맞서 포용적 복지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케어 4년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아무개(45) 씨 가족은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어머니와 지적장애 아들을 두고 있다. 정 씨 본인을 포함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다. 정 씨가 2019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소득·재산 기준은 적합했지만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또 다른 자녀가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돼 수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정 씨 가구는 2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았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박아무개(70) 씨 부부도 생계유지

를 위해 부득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똑같은 이유(생계를 달리하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다)로 거부 답변을 받았으나 2021년부터 정부가 노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이번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말했다. 박 씨의 아들(42)은 코로나19로 실직해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박 씨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아무개(35) 씨는 만성신장병·빈혈 그리고 상세 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두 살 아들이 있다. 최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 21일 동안 입원치료

지난 4년간 우리 생애의 보건의료 분야 일상에서 어느 정부보다 소득·돌봄·의료보장 폭을 크게 넓혔고 빈곤과 불평등에 적극 대응해 포용적 복지 기반을 내실화했다.

를 받았는데 의료비로 1243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상급병실 급여화 및 선택진료비 폐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준 덕분에 본인부담금이 397만 원(약 68% 감소)으로 줄었다. 의료비 걱정이 훨씬 줄어든 것이다. 2019년 봄 극심한 복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김아무개(40) 씨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돼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후 검사비(비급여) 65만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담배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의 60%(본인부담률) 수준인 19만 원(총 46만 원 경감)만 냈다. 김 씨 역시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포용적 복지를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4년(2017~2020년) 동안 의료비 경감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이 국민이 대표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우리 생애의 보건의료 분야 일상에서 어느 정부보다 소득·돌봄·의료보장 폭을 크게 넓혔고 빈곤과 불평등에 적극 대응해 포용적 복지 기반을 내실화했다.

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0년 212만 명으로 늘었다. 수급률은 3.05%(2017년)에서 4.0%(2020년)로 상승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총 26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도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안전망도 강화했다. 한시생활지원(169만 가구, 1인 가구 52만 원) 등 저소득층 소득 보장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빈곤 완화 등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아동 돌봄 부문도 대폭 넓어지고 튼튼해졌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돌봄 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혜택

자료: 국민건강보험

확대된 혜택	시행시기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017년 8월~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7년 10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5%)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10%)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2017년 11월~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18년 1월~
국민 부담이 큰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8년 4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수면질환에 대한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보장구(욕창예방방석, 이동식 리프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2018년 10월~
뇌, 뇌·경부 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청수술(인공와우) 건강보험 혜택 확대	
1세 미만 영유아의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2019년 1월~
하복부(췌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2월~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열비교정술 및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2019년 3월~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5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7월~
상급병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기이식 전 면역검사 등 응급·중환자 관련 건강보험 혜택 확대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9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기준·절차 개선	2019년 10월~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9년 11월~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0년 2월~
눈(안구, 안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0년 9월~



1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7월 28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에서 열린 '인공지능 융합 AI+X 프로젝트 의료 데이터 활용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에서 공적 기반도 크게 확충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2017년 3157곳→2020년 4958곳)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2018년 18곳→2020년 364곳)했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혜자가 증가하고 치매 의료비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공보육 이용률 상승 등 국민의 돌봄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3700만 명에게 약 9조 원 의료비 경감

치매국가책임제도 2017년 9월부터 시행됐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남편이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았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 예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뒤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원예·미술·운동수업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치매검사를 받는 등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이용했다.

박 씨는 “이런 공적 시설이 있는지 예전에는 몰랐다. 센터에서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 각 시·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2018년 1월) ▲상급병실 급여화(2018년 7월, 2019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앞으로 핵심 추진과제로는 방역·백신·치료제 삼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일상 회복,
그리고 '소득·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복지 선도국가 도약'을 내걸고 있다.

등 3대 비급여 해소,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총 3700만 명에게 약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2018년 1월~2020년 10월)이 돌아갔다. 초음파·MRI 급여화도 확대됐다. 정부는 “가계 의료비 지출을 2017년 33.7%에서 2018년 32.3%로 낮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암사망률(10만 명당 한국 160명·OECD 196명, 2017년)을 달성하는 등 높은 수준의 건강안전망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문아무개(70대) 씨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았다. 소득 하위 40%에게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 대상이 2021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른까지 확대된 덕분이다. 기초연금 30만 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2020년 332만 명에서 2021년에는 598만 명으로 늘어 노인 생계유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



2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월 1일 폭염 대응 및 방역 현황 점검차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여했다.

방역-백신-치료제 핵심 추진과제

핵심 추진과제로 방역-백신-치료제 삼박자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소득·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복지 선도국가 도약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에서는 지방 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지역필수 의료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해서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확대 및 0~1세 영아수당 도입(2022년)을 검토하고 상병수당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

조계환 기자

건강 챙기고 의료비 지출 줄이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프렐미나리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7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스스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자신의 과정과 그에 따른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만~6만 원의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된다. 시범사업 평가를 거친 뒤 본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시범 지역 내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으로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은 ‘1차 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같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쳐 1인당 연간 최대 5만~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물, 지역화폐(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 가능한 대상자(휴대전화 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 지역 내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을 보면 건강예방형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이다.

1회 310만원 폐암 치료비가 14만원으로 “부담없이 치료 전념... 날 지켜준 건강보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보장성 강화 최우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폐암은 진단 이후 치료가 어렵고 말기로 갈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통계적으로 약 30분에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중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암이다. 현재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Keytruda)가 폐암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좋지만 1회 투약에 수백만 원의 약제비를 내야 한다. 환자는 치료하기 위해 연간 1억 원 정도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은 A씨는 고가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투약받았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이 약을 선택했다.

A씨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1회 투약에 310만 7692원을 전액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전했다. 경제 부담 때문에 치료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A씨는 약 값의 5%에 해당하는 14만 3020원만 부담해 약 296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A씨는 “전 국민의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흘러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를 보호해준 건강보험 보장성 제도가 새삼 고마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79.2%로 ‘전국 으뜸’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암 전문병원인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가 대부분이며 입원 전문질병군 비율이 높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와 고액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선택 진료 폐지, 2인실·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급여의 급여 전환 확대 등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문재인 케어의 시행 효과를 언급했다.

이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증명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2%로 '전국 으뜸'으로 조사됐다. 2016~2019년 의료기관 회계 자료와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합산해 도출한 결과다.

건강보험 보장률 79.2%에 대해 병원 측은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79만 2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했고 환자 본인은 나머지 20만 8000원만 부담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이다.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든다. 2019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였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이보다 무려 15%포인트 높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보장률 80%에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근접했고 문재인 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과의 격차는 25.9%포인트로 이를 환자 부담액으

로 환산하면 무려 2.2배 차이가 난다.

신명근 병원장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중증질환자 비중이 가장 높은 암 특화병원"이라며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내 최저 수준의 환자 의료비 부담 등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병원의 노력도 뒤따랐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특히 최소한의 필수 검사만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최신 암 치료법을 우선 적용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 병원 측에서는 "평균 재원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짧은 6.7일에 그쳤다는 데서 입증된다. 재원 일수가 짧다는 것은 수술과 치료가 잘돼 빨리 퇴원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 관리에도 핵심 역할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1%로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한마디로 노인 인구가 많고 가난하며 의료서비스는 소외됐다는 의미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전남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이다. 무등산 인근 산자락 화순군 일심리 허허벌판에 들어선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힘쓰는 이유다.

암 전문 권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암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암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이암종 및 지역특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79만 2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했고 환자 본인은 나머지 20만 8000원만 부담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경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보장률 단위: %)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위	병원명	구분	보장률
1	화순전남대병원	공공	79.2
2	칠곡경북대병원	공공	70.3
3	양산부산대병원	공공	69.9
4	서울대병원	공공	69.5
5	충북대병원	공공	69.4
6	부산대병원	공공	69.1
7	고신대복음병원	민간	69.0
8	경북대병원	공공	68.3
9	충남대병원	공공	68.0
10	대구가톨릭대병원	민간	67.6
평균			70.0

건강보험보장률(최고-최저) 병원 간 차이: **25.9%p**

환자 의료비 부담비율(최고-최저) 병원 간 차이: **2.2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자가격리자 치료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 관리와

예방 활동에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 예방관리사업을 공유하는 등 암극복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자가격리자 치료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 관리와 예방 활동에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병원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의료 자원 집중과 지역 내 필수 의료 연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 해

어르신·아동·여성 등 연령과 대상에 맞춰 건보 적용 확대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어르신과 아동, 여성 등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춰 더욱 확대했다.

먼저 어르신의 경우 65세 이상 대상으로 2017년 11월 틀니와 2018년 7월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다. 그 결과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6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임플란트는 6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줄었다.

2017년 10월에는 기존 10~20%였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5%로 낮췄고 12세 이하 아동의 총치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평균 10만 원이었던 부담금이 2019년 1월부터 2만 5000원으로 줄었다.

여성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30%로 낮췄으며 신선배아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7회로 늘리며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2018년 7월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확대했다. 입원의료비와 암·희귀난치질환 등 고액 외래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비급여를 적용해 본인 부담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보험 지원은 2019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 기준액을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간소화했다.

2020년 6월에는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도 지속해서 선정 중이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점차 늘리고 있다.

소를 위해 전남 내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협력 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연속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개원 17년을 맞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외진 산골에서 지역의 불리함을 딛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유 전문병원’을 향해 도전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

심은하 기자

더 든든해지는 건강보험 혜택

MRI
건강보험 적용
(복부, 흉부, 안면)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자궁)

상급병실
2·3인실
건강보험 확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
건강보험 확대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이제, 병원비 걱정은
삭~자주세요!



공공병원 존재의 이유

기고

머지않은 과거에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색다른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효과는 좋지만 값이 매우 비싼 치료제는 아예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약값을 마련할 수 없어 이른바 ‘그림의 떡’이 되는 순간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더 고통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대기 위해 사는 집을 팔고 퇴직금을 미리 쓰거나 큰 빚을 지는 환자 가족도 적지 않았다.

이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이후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꾸준히 넓혔다. 참여정부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고 박근혜정부도 이를 이어 받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적으로 넓히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임기 초기에 발표했다.

아울러 한 가정을 파산시킬 만한 병원비가 나오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이 덕분에 과거에 건취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환자 수는 대폭 줄었다. 물론 주요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다.

하지만 또 다른 ‘그림의 떡’이 있다. 병원비 걱정은 대폭 줄었지만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병원의 수익보다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돕는 병원이 적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공공 병원의 부족은 우리 사회의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다.

감염병 위기 중 입원 못해 사망 하기도

2019년 말 정체가 밝혀져 2020년 초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된 코로나19로 많은 환자가 숨졌다. 전 세계적으로 2021년 8월 11일 기준 약 2억 명의 환자가 생겨 그 가운데 약 424만 명이 사망했다. 감염된 환자들은 격리 병상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고열, 호흡 곤란 등 여러 증상을 해결해주는 치료를 받았지만 주로 고령층과 평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 유행으로 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3월 코로나19 검사만 14번을 받으면서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 군이다. 감염 환자의 경우 다른 환자나 의료진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차

하루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생기는 최근에도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힘들며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환자가 생기면
자칫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하기 위해 격리 병상 등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부족했던 것이다. 다른 나라에 견줘 인구 당 병상 수는 많았지만 정작 감염 환자를 위해 병상을 내어줄 형편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병원의 존재였다. 2020년 3~4월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을 때 코로나19 환자 5명 가운데 약 4명 꼴인 78%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하지만 공공병원이 부족해 정유엽 군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생긴 것이다. 하루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생기는 최근에도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대처하기가 힘들며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환자가 생기면 자칫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수명 및 건강 결정

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아니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소에도 의료 시설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수명이나 건강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조희숙 강원대 의대 교수팀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기준 강원 영월권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 동남권에 사는 이들에 견줘 응급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뇌혈관질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록 의료 기술이 발전했지만 응급이나 뇌혈관질환이 생겼을 때 너무 멀리 있어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얘기도. 기대 수명이나 질병 없이 사는 나이인 건강 수명 역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견줘 크게 높았다는 것도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지역에 병원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 등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경영 자체가 어려워 민간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교육 수준 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도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등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이 99%, 프랑스 63%, 독일 41%, 일본 26% 등으로 우리나라의 9%에 견줘 높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처하고 뇌졸중 등 응급 질환 등으로 더 많이 사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



●
김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코로나19 위기 속 미래 준비 여유 생겨 사회 안전망 튼튼하게 받쳐주는 나라로”

‘특고’에게 듣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의미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돼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무엇보다 기존 노동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

기 위한 핵심 단계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들은 이번 제도 시행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 반가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서울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최모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번 소식을 반겼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7년째,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해 신규 고객 유치 등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일을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곤 했다. “평소 실적



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며 몇 달간 불면증에 시달렸다. 막상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도 준비할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버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금은 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만약 다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나마 생긴 거 같다.”

7월 1일부터 시행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은 최 씨와 같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가 월 80만 원 이상이면 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고 직종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최 씨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특고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줬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업주·특고 월 보수액 0.7%씩 “큰 부담 아냐”

이번 제도에 따라 각각 사업주와 특고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0.7%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 원이면 사업주, 특고 각각 1만 4000원, 총 2만 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최 씨는 “월평균 매달 1만 4000원 정도를 고용보험료로 내게 될 텐데

최 씨는 “월평균 매달 1만 4000원 정도를 고용보험료로 내게 될 텐데 이 정도면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되는 금액”이라며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부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22개 직종(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자격 소지자)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특고종사자의 보수액 기준
만약 보수가 200만 원 이라면?**

사업주 0.7% 특고종사자 0.7%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같이 부담해서 총 28,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4%)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입니다.

이 정도면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되는 금액”이라며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학습지 방문강사로 일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 사업주 측에서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비롯해 특고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터였다. 그 역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며 어떤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월 급여의 0.7%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어려움이 닥쳐 퇴직한다면 다른 직종 사람들은 실업급여 등 안전성을 보장받지만 특고종사자의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등이 없어 일을 그만두는 순간 막막해진다. 그런 탓에 회사가 무리하게 실적을 요구할 때 ‘울며 겨사 먹기’로 자신의 돈을 써가며 신규 회원을 늘리고 목표치를 맞추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다.”

택배기사 등 “다쳤을 때 대비 산재보험 든든”

이번에 시행된 제도에는 출산전후급여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도에 따르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는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경기 수원에서 학습지 방문강사로 일하고 있는 한 모 씨는 “2019년 말 결혼해 현재 임신을 계획 중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특고 가운데 학습지강사, 보험설계사 등에는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출산 시 수당 등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었다”며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을

“몸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치면 병원비 걱정부터 한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든 걸 다행이라 생각한다. 보험료로 매달 약 2만 원을 낸다. 큰돈은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제도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구직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요건은?

-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 *다만, 소득공제대상인 이직이해도 인정
-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혜택은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합니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고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1년간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최모 씨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몸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치면 병원비 걱정부터 한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든 걸 다행이라 생각한다. 보험료로 매달 약 2만 원을 낸다. 큰 돈은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제도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사회 안전망 구축 의미 모두 공감했으면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험업계에선 사업주 측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상쇄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험설계사 최 씨는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감축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는 감돌고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이 같은 사회안전망이 왜 구축돼야 하는지 노동자와 사업자,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덧붙혔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 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연 기자

즐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32. '용기'를 챙겨가는 장보기



모임에서 실천해 보기로 한
'용기'내 챌린지를 위해



신환경 제품 가게에 왔습니다.



외국의 '제로웨이스트샵'에 관한 영상을
본 적 있었는데



얼마 전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방세제가 떨어져



채거른 용기에 필요한 만큼 세제를 담아 뽐니다.



빈 용기를 기부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어요.



주방세제 외에도 내용물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과



다양한 친환경 생필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수세미오이를 말려 만든 천연수세미도 골라봅니다.



이런 가게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 생존권 위해 온 국민 동참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우리가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맘껏 누릴 수 있었던 건 화석연료를 다량 소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연소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로써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은 경제성장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평균 농도는 420ppm에 육박한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많은 과학자가 우려하는 임계점인 450ppm에 도달하는 데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탄소 포집·저장과 산림 흡수 등으로 순 배출을 제로(0)로 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2015년 채택된 유엔(UN)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한 ‘교토 체제’와는 사뭇 다른 신기후체제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의찬 위원장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이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2를 넘어설 정도로 탄소중립은 신기후체제의 대세”라고 전했다.

산업체 협조와 국민 지지 없이 불가능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권 국가이며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탄소중립이 매우 힘든 과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전의찬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잘만 대응한다면 5월 29일 탄소중립위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고탄소국가에서 저탄소국가로 거듭나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에너지 기술,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등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중심인 산업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건물과 수송 분야 등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지지와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산업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분야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 기구가 바로 탄소중립위다. 전 위원장은



2019년 12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회의장에 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 전의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고탄소국가에서 저탄소국가로 거듭나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에너지 기술,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등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에 따라서 정책 추진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
해 정부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위주로 바꾸기 때문에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 위원장은 “탄소중립위는 산업계의 국제 경
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를 위해 산업
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해 대책
을 마련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는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
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분과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향 계획’의 비전과 원칙 초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
고 있다.

전의찬 위원장은 “다른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도 마련해야 하고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새
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현재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다. 농업, 축산,
해양, 수산 등에서의 탄소중립 방안을 수립하고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기
후변화분과의 임무다.

우리 일상생활이 전 세계 기후변화 초래

전 위원장은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세종대 기후변화특



7월 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분과 농
수산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 탄소중립위원회

성화대학원 책임교수로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수송·생활저감위원장
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모두 탄소중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활동”이라며 “계속해서 지구를 기후위기에 구하고 우리 정
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기
여하기 위해 탄소중립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례 없는 폭염, 장마, 한파와 가뭄이 전 세계를 휩쓸
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경고하고 있다.
전의찬 위원장은 “국민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생각하지만 극지방이나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 많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우
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 국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와 동참 없이 성공할 수 없다. 가정
에서, 직장에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
여야 한다.

“이제 우리 집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하고, 내연기관
차 대신 전기차를 타야 합니다. 좀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해 탄소중립
에 온 국민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낙연 기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사회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무얼 담았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그해 12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5월 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해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수소 등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그 내용에 대해 국제법 등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진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시민 500여 명 참여 탄소중립시민회의 출범

무엇보다 2050년 탄소중립 계획에 국민 의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탈원전 공론화 과정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시민 뜻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방자치단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일반 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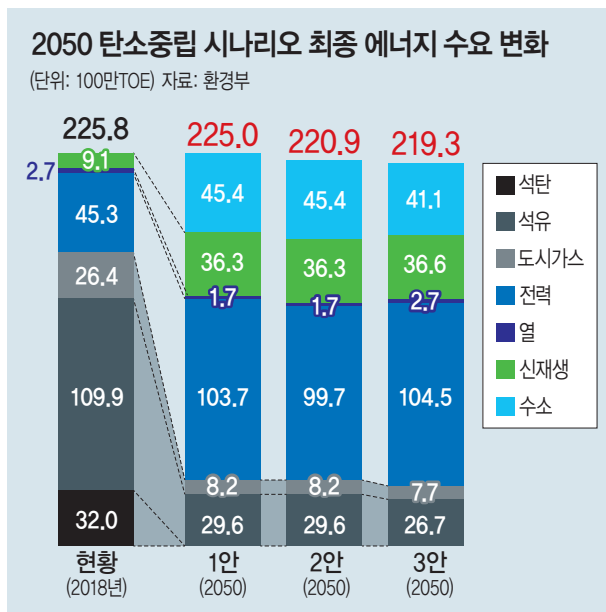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월 7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가 출범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시민 뜻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시민회의의 구성은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미래세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참가자들은 출범 후 한 달 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온라인 학습과 토론 등을 하고 있다. 동영상 학습을 통한 ‘자가숙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인 ‘시민탄소교실’을 통해 기후위기 관련 지식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학습하고 있다.

학습을 마친 참여자들은 9월 11~12일 쟁점별 종합토론을 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탄소중립위는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숙의에 참여하고 토론을 하면서 지식도 생기고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0만 톤,
2안 1870만 톤, 3안 0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이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에너지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건물), 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0만 톤, 2안 1870만 톤, 3안 0(넷-제로)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1, 2, 3안

에너지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억 696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0만 톤, 2안은 3120만 톤, 3안은 0을 전망한다.

에너지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억 6050만 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 톤이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수송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 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 1120만 톤(940만 톤은 상쇄), 3안 280만 톤이다. 수송 부문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0만 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 710만 톤, 3안 620만 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안됐다.

농축수산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0만 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 1710만 톤, 2·3안 1540만 톤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 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 톤으로 전망했다. 2018년 기준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 톤이며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 2410만 톤, 3안 2470만 톤이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는 1360만 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그 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다.

국민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10월 말 확정

윤순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1·2안 역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이다. 1·2안의 온실가스 잔여 배출량은 파리협정에서 인정하는 해외조립 등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을 하면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

원낙연 기자

지구온도 1.5도 상승 기후위기 마지노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2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불과 3년 전 나온 전망보다 10년 앞당겨졌다.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한 2021년 전 세계는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재난은 전조에 불과하다고 했다. 1.5도 상승에 이르면 폭염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고, 등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이들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이 다가올 위기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1~2020년 지구 평균온도는 1.09도까지 올랐다. 2013년 나온 제5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2003~12년 0.78도 지구온난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31도 더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40년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기간을 평균하면 1.5도 도달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18년 IPCC가 내놓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1.5도 도달 시점을 2030~52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시간이 10년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는 마지노선이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당시 참여국들이 합의한 약속이다. 당사국총회 의장인 알록 샤르마 영국 하원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인간의 행위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경고가 될 것이고 이는 26차 당사국총회가 가장 결정적 순간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고 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체불명 기술까지 동원했다?

=일부에서 “억지로 꺾맞춘 탄소제로… 정체불명 기술까지 동원했다”라며 “정체불명 신발전(암모니아·수소)도 동원,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이름도 생소한 ‘무탄소 신전원’을 기술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데도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국가 및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터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기술개발에 나섰고 암모니아 발전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 중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시점의 모습이므로 이미 상용화된 기술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각국이 연구 중이고 앞으로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술도 함께 감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서울면적 10배 덮는다?

=일부에서 “정부안 실현하려면 태양광 패널로 서울면적 10배 이상 덮어야”라며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야 가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손실을 시나리오에 미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참여형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산지 등 환경훼손은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전력 저장손실, 송배전손실률 등 전력손실을 이미 고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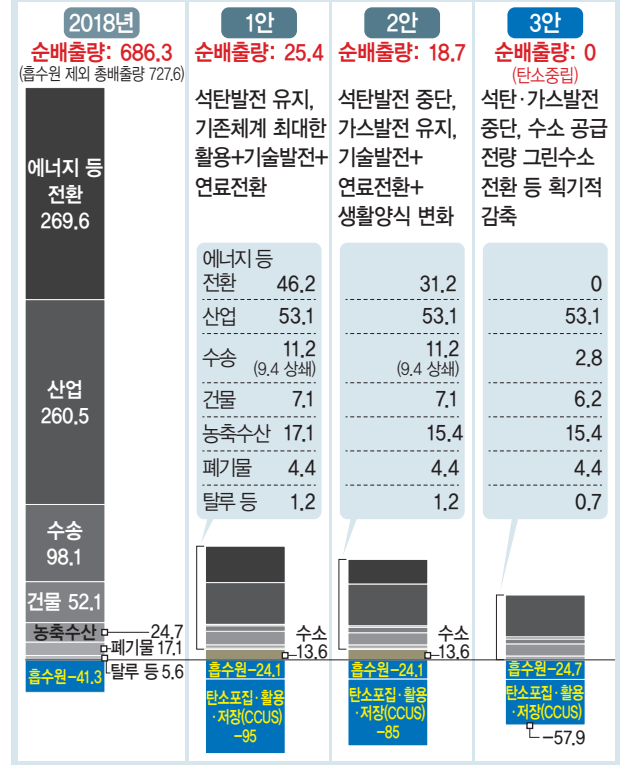
—비우방국에 안보 핵심자원 넘긴다?

=일부에서 “비우방국에 안보 핵심자원 넘겨… 북이 한 전력망 ‘인질’ 삼을수도”라며 “비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 안보의 핵심자원을 넘기는 것은 향후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그리드(전력망)는 주변 국가와 전력망 연계를 통해 비상시 주변국과 예비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력수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단위: 100만 톤CO2eq) 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급 우려 해소 및 동북아 역내 긴장 완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반영된 국가별 전력 연계 용량(2~3GW)은 우리 전체 설비용량(128GW)의 약 2% 내외로 국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는 매우 낮습니다.

—1·2안이 탄소중립 포기?

=일부에서 “1·2안이 ‘탄소중립 포기’… 석탄·가스 화석연료 유지하나”라며 “시나리오의 1·2안이 순배출량이 ‘0’이 되지 않아 탄소중립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개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1·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파리협정이 허용한 해외조립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감축이 가능합니다. ●

원낙연 기자

‘모두에 이로운 기술’ 무기로 일본에 역수출

2020년 소·부·장 스타트업 100 선정 ‘이랑텍’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이하 소부장 스타트업 100)을 선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취지다. 2020년 시작해 2024년까지 매해 20개사씩 5년간 신생기업 총 100개사를 선정 지원한다.

첫해인 2020년 11월 선정된 신생기업 20개사는 6개월 만에 매출 227억 원, 고용 170명 등 성과를 보였다. 2020년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용 광통신 부품 제조기업 이랑텍을 찾아가봤다.

주파수 필터 개발·제조 사업 활발한 성장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 안에 필요한 물질은 통과시키고, 유해한 것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죠.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에도 필터가 있어요. 사용되는 주파수에 등록된 특정 통신사업자는 통과시키고 타사는 걸러주는 필터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필터를 개발·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 8월 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랑텍 사옥에서 만난 이재복 대표는 회사를 이렇게 소개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동통신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한 그는 약 20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회사를 창업했다. 창업 멤버는 4명이었다. 첫해 매출은 27억 원이었고 4년 차를 맞은 2021

여러 주파수 가운데 단 한 채널에서라도
불량이 나올 경우 제품 전체를 버려야
하는 등 개발이 까다롭다. 일본 역수출은
다른 곳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영역에
용기 있게 도전한 결과다.

1 이재복 대표가 경기도 화성시 이랑텍 사옥 2층에 적혀 있는 사훈 ‘진인사대천명’을 설명하고 있다. 2 이랑텍에서 생산된 광통신 부품과 제품들



년 현재 직원 수 53명, 2021년 상반기에만 벌써 2020년 매출
인 60억 원을 달성했다. 그야말로 높은 성장세다.

모두에 이로운 기술… 일본·미국 등 수출도 활발

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장비를 구축, 개통할 때 통신사 간
주파수 간섭을 우려한다. '주파수 간섭 제거 원천 기술이 있다
면 통합 장비 한 대로 통신사 간 간섭 걱정 없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텐데...' 이 대표는 이런 생각으로 상호간섭제거
필터(High PIMD Solution Multiplexer), 5세대(5G)용 무선
주파수(RF) 필터 등을 개발하고 상용화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은 약 80종이다. 1년에 약 50개 제품을 신규 개발한다.
매출 규모는 국내 5G 시장 약 30%, 글로벌 시장 약 70% 정도
이며 일본, 미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한다. 무
선 주파수 부품을 개발하고 국산화를 주도하면서 2020년 일
본 대표 이동통신사에 5G 핵심 부품을 70억 원 규모로 역수
출했다.

이랑텍 기술은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건축주 등에
게도 고루 이득을 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선 통신 구축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
어지니 좋죠. 이는 자연스럽게 통신료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
게도 이롭습니다. 통합 장비 한 대만 설치하면 되니 건축주 입
장에서도 화재 위험 등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요.”

여러 주파수 가운데 단 한 채널에서라도 불량이 나올 경우
제품 전체를 버려야 하는 등 개발이 까다롭다. 일본 역수출
은 이렇게 다른 곳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영역에 용기 있게 도
전한 결과다. '글로벌 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아기
유니콘200' 선정 등 굵직한 국가 사업에 다수 선정되는 기록
도 세웠다.

떨어진 경험 쌓이며 주요 사업 속속 선정

2020년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경쟁률이 34:1에 달하는 등
치열했다.





3

“우리가 가진 기술 하나로만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중소기업들은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야, 불편해하고 꺼리는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동력이 멈추지 않죠.”

3 생산조립현장 4 연구원이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5 이재복 대표가 생산기술팀장과 무선주파수(RF) 특성
중점 요소 도출을 점검하고 있다.



4

“부품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어요. 신생기업 4년 차인 저희 기술을 선입견 없이 살펴봐줬다는 점에 감사하죠. 통신 장비 세 대를 한 대로 줄이는 기술을 ‘공용화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통신 간섭에 대한 염려가 큰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겐 숙원 사업이죠. 공용화망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록을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이 대표는 무수히 많은 지원 사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했다고 말한다.

“왜 떨어졌을까?” 자문해보고 고민하고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이 시간이 성장의 큰 자양분이 됐죠. 투자를 유치하며 받았던 수많은 질문도 빠짐없이 데이터로 구축해놨어요. 이 자료를 보내면 추가 질문이 안 옵니다.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보완하고 데이터를 쌓으니 귀중한 자산이 되더군요.”

2020년 소부장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과 기술개발(R&D)사업 가점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금도 큰 의미이지만 구성원들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개인적인 실현을 넘어 국익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싹튼다. 선정 기업에 주는 멘토링으로 더 성장할 기회도 얻었고요.”

최근엔 고용 창출 면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2020~2021년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직원도 채용했어요. 신입직원 채용은 상징적인 의미가 큼니다. 인적 투자가 없는 기업은 윤리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인력에 계속해서 투자해야죠.”

생산 공정서 난관 겪으며 성장통 경험도

자리를 잡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창업 초기 조직원 전체를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등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차분히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회사 방향성에 대해 공감과 협의를 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전문 연구개발자로 일했던 이 대표는 생산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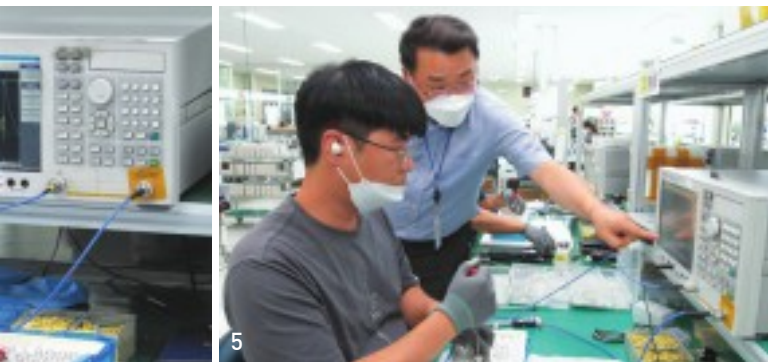
“샘플과 시제품 제작에 정말 자신 있었는데 이를 생산까지 완벽히 나오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렵더군요. 창업한 해인 2017년 8월 한 고객사에서 제품 불량 불만사항이 접수된 적이 있어요. 한 달 줄 테니 해결하라 하더군요. 생산 공정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공부하고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매진했죠. 딱 한 달 후 그 고객사에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호된 성장통을 겪은 셈이죠. 이를 극복하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향후 이 대표가 바라보는 주요 사업 지역은 유럽 시장이다. 국경이 인접해 국가들끼리 통신 간섭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굉장한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쪽 회사들의 무선주파수 규격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현재 영국 지하철 공용화망 프로젝트에 저희 제품이 나가는데 이 역시 사전에 철저히 연구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창업 선포, 앞으로 기업공개가 목표

이 대표는 2021년 4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하나길 사옥을 신축하고 입주하면서 ‘이전식’이 아닌 ‘제2 창업 선포식’이라 이



를 붙였다. 그는 선포식에서 “지난 4년의 노력은 이 건물로 완성됐고 앞으로 4년은 기업공개(IPO)로 완성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2 창업 원년 멤버다”라고 말했다.

“창업 이후 늘 외쳤던 세 가지가 국가 지원 사업 발굴, 투자 유치, 기업공개였거든요. 앞의 두 가지는 달성했고요. 앞으로 남은 한 가지가 기업공개입니다. 우리나라 25년 통신 분야 역

사에서 상장사는 초창기 단 두 곳뿐이었고 이후 약 20년간 더 없었어요. 큰 공백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20년 만에 이랑텍의 성공으로 ‘이곳은 아직 기회가 있는 분야’라는 걸 선후배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한 상징적인 방법이 기업공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이 분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이랑텍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랑텍 건물 2층 카페테리아 한쪽 벽에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사훈이 적혀 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이 말을 강조한 이 유를 묻자 이 대표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가진 기술 하나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야, 불편해하고 꺼리는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동력이 멈추지 않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의미입니다.” ●

글 김정연 기자, 사진 박윤섭 기자

‘소부장 창업기업 100’ 5년 간 매해 20개 씩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평가를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생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상호 연결해 약 1개월간 사업 과제를 고도화한 후 최종 선발한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됐으며 2024년까지 매년 20개 사씩 5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2020년 11월에 선정된 신생기업 20개사는 6개월 만에 매출 227억 원, 고용 170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소·부·장 스타트업 100’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발굴·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21년은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를 설정했다.

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을 갖춘 유망한 신생기업을 발

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접수 결과 520개의 신생기업이 지원해 2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현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후 2개월에 걸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성·확장성, 성장 가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10개(25%), 스마트엔지니어링 8개(20%),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8개(20%), 복합소재 8개(20%), 융합바이오 6개(15%) 순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개(50%), 충청권 12개(30%), 영남권 5개(12.5%), 호남권 3개(7.5%) 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증강형 웨어러블 글래스 기기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능성 투시 디스플레이 소재, 고해상도 바이오 디지털 이미징 분석 솔루션, 자율주행차량 및 산업용 4차원(4D) 이미지 레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 참신하고 실험적인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기업은 수요를 제기한 대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들의 교육과 멘토링을 1개월 동안 받아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평가(9월)를 거쳐 최종 20개 기업이 ‘소·부·장 스타트업 100’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다.

노메달·끝씨도 관찮아 축제가 된 ‘모두의 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은 우리 사회가 올림픽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금메달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올림픽이 국가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축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20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8월 8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2020 도쿄올림픽 폐막

2020 도쿄올림픽이 8월 8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전대미문의 관중 함성 없이 치러진 대회였다. 애초 2020년 7월로 예정됐던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대회 연기를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회가 시작됐지만 선수촌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방역 문제가 드러났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수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대회 기간에도 중단론이 흘러나올 정도였지만 결국엔 17일간의 여정을 모두 치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벼랑 끝 등불 같던 도쿄올림픽을 선수들은 굵은 땀방울로 채우며 또다른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쏟아지는 부담감 속에서도 침착한 모습으로 여자 단체전 9연패라는 대업을 썼다. 올림픽 첫 도전에서 3관왕을 기록한 안산(20)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다. 연신 “파이팅”을 외치는 김제덕(17)의 모습에 많은 이들은 힘을 얻었다.

마지막 올림픽 도전에 나선 여자 배구 대표팀 김연경(33)은 연일 기적을 썼다. 대회 내내 “원팀”을 강조했던 대표팀은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쓰며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 육상에서 감동 드라마를 쓴 우상혁(25)과 우리나라 수영의 가능성을 다시금 보여준 황선우(18)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 코로나19의 엄혹한 현실을 잊었다.

국가 아닌 개인 정체성 찾는 축제로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올림픽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헌신과 투지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어느 대회 때보다 뜨거웠다. 금메달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올림픽을 계기로 직접 스포츠를 즐기겠다는 사람도 늘어났다. 올림픽이 국가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축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스포츠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음을 확인했다. 거리두기가 최고의 선으로 자리 잡은 시대.



이번 대회 되찾아야 할 보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예외상황은 오히려 올림픽과 스포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도 했다.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넘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가감없이 드러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은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로 3년 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승전보를 예고했다. 특히 수영, 육상 높이뛰기 등 기초 종목에서 아시아·한국 신기록을 냈고 사격, 역도, 다이빙, 탁구에서도 희망을 쏘았다. 도쿄올림픽은 선수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축제였다.

도쿄에서 확인한 파리의 기대주들

‘포스트 장미란’ 이선미(21)와 한명목(30)은 이번 대회 여자 87kg급과 67kg급에 출전해 모두 4위에 올랐다. 5kg 차이로 동메달을 놓쳤지만 이선미는 경기 뒤 “다음에는 긴장하지 않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유를 잃지 않았다. 1kg 차이로 시상대에 서지 못한 한명목 또한 다음 올림픽에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등극한 우상혁은 경기가 끝난 뒤 “나는 아직 어리고 2m 35를 이미 뛰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들이 내가 무서워서 은퇴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3m 스프링보드 결선에서 4위를



차지해 ‘다이빙 불모지’ 우리나라에 새 역사를 연 우하람(23)은 “메달 딸 때까지 도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고 남자 마루에서 0.533 점수 차로 4위에 오른 ‘체조 샷벨’ 류성현(19)은 “앞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탁구에서 ‘신예’ 신유빈(17)의 폭발적인 잠재력과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인 신유빈은 개인 단식에선 백전노장 니시아리안(58·룩셈부르크)을 만나 역전승을 거뒀고 중국 출신의 독일 귀화선수 한잉(38)을 단체전에서 만나 분전하며 부족했던 국제대회 경험을 쌓았다. 운동선수로서 기량이 절정을 향해 가는 20세에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면 한층 더 성장한 실력을 선보일 것으로 탁구계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위협 속에 치러진 2020 도쿄올림픽. 우리에게 메달보다 진한 감동을 안겨준 4위의 그들이 있었다. 4강 신화를 이룩한 여자 배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근대5종에서 자신을 일깨우는 정진화, 배드민턴 여자복식 이소희·신승찬,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한 높이뛰기 우상혁, 체조 차세대 간판 류성현, 남자 탁구 대표팀, 25m 속사권총 한대운,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우하람, 역도 이선미 | 연합

수영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낸 황선우는 ‘파리 기대주’ 중에서도 0순위로 꼽힌다. 18세인 황선우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아시아 신기록(47초 56)을 세웠다. 수영 선수로서는 어린 나이에 근력운동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성과라 전 세계 이목이 쏠렸다.

스포츠 클라이밍(암벽타기) 서채현(18) 또한 파리올림픽부터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 스포츠 클라이밍은 스피드(15m 높이인 암벽을 가장 빨리 오르는 선수가 승리하는 경기), 볼더링(주어진 시간 동안 설계된 코스를 완등하는 경기), 리드(일정 시간 동안 15m 암벽을 가장 높이 오르는 자가 이기는 경기) 등 3개 세부종목을 합산해 순위를 매겼는데 파리에서는 스피드 종목이 따로 분리돼 경기가 진행된다. 리드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며 메달권에 진입했던 서채현은 스피드 종목에서 고전했고 종합 8위에 올랐다.

도쿄패럴림픽 8월 24일 개막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33개 종목 중 29개 종목에 출전해 총 20개의 메달(금6, 은4, 동10)을 획득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금9, 은3, 동9) 보다는 성적이 하락했지만 여러 종목에서 신기록이 쏟아졌고 선수와 시청자 모두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인화 선수단장은 8월 8일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고도 ‘금메달을 못 따 죄송하다’던 과거 선배들과 달리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만족하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는 자체를 즐겼다”며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기량을 발휘한 10대 선수들을 바라보며 다음 올림픽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수많은 위로와 희망을 남기고 코로나 시대의 올림픽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감동과 환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는 도쿄패럴림픽이 그 무대다. ●

이준희 <한겨레> 기자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 개인안심번호 도입 일상 속 정보 보호 강화 ‘눈에 띄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년 성과

위킹맘 A씨는 최근 세 살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을 감지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해 해당 사항을 명확히 확인했다.

직장인 B씨는 음식점에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해서 더 이상 개인정보에 대해 불안하지 않다. 또한 최초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정보무늬(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7월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선(75.5%)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등이 국민 생활 속 체감정책 우수 성과로 뽑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CCTV 가이드라인 개정과 QR코드 동의 간소화, 개인안심번호 등의 정책을 펼쳤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안

1

코로나19 방역 속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역일차	방역시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사·군·구(단위명)	개인안심번호 + 출구 시 QR코드(안심번호)
2.19	14:15	✓	종로구	12가34나



- ✓ 수기명부에 “이름” 항목은 삭제하고 “사·군·구 단위 거주지”와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양식을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 ✓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성별, 연령 등 개인정보정보를 비공개하고,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의무화

2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발열 점검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 출입자 얼굴 영상 저장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도움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잘 배려해 대응하였습니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번호 도입과 수기출입 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등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사생활 침해 등 국민 우려 해소

이러 관련 시스템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하고 인공지능(AI) '이루다' 개발사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처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감독기구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다. 이는 향후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총 17개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강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대 시범과제를 추진한 결과 결합사례는 2020년 30건에서 2021년 7월까지 105건으로, 결합 분야는 금융에서 보건의료와 행정 등의 다변화를 견인하

7월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선(75.5%)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등이 국민 생활 속 체감정책 우수 성과로 뽑혔다.

는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 개인 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 보호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 중심의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치(거버넌스) 추진과 '올 마이 데이터(가칭)' 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

한편 개인정보위는 8월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지난 1년 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회 조직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직원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 1주년을 소통·혁신·전문성 등 3대 가치가 내재화된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고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정연 기자

3

어린이집 CCTV 열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태극기 세 점 국가 보물 된다



데니 태극기

광복절을 앞두고 항일 독립운동의 의지와 피, 땀이 서린 태극기 세 점이 국가 보물로 예고됐다. 태극기는 고종 20년(1883) 조선의 국기로 1949년부터는 대한민국 국기로 공식 채택되면서 망국의 아픔과 건국의 영광을 함께해 왔지만 국가 보물로 지정된 적은 없다.

문화재청은 8월 12일 ‘데니 태극기’와 ‘김구 서명문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세 점은 30일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미국 외교관 소장 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 태극기’는 세로 182.5cm, 가로 262cm로 옛 태극기 가운데 가장 크고 국기 제정의 초창기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다. 제작추정시기는 늦어도 1890년이다. 우리가 국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시기는 1882년 9월이었다. 조선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시기는 1882년 9월이었고 1883년 3월 6일 고종은 전국에 사용토록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후 태극기의 모습을 그리거나 기록한 자료들은 일부 남아 있지만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니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다.

데니 태극기는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Denny, 1838~1900)가 소장했던 것으로 1891년 1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간 것을 1981년 그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



김구 서명문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

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3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1876~1949) 주석이 독립 의지를 담은 글귀를 적어 친분이 있던 벨기에 신부 매우사(본명 샤를 메우스)에게 준 것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매우사 신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해련 여사에게 이 태극기를 전했고 후손들이 보관하다가 1985년 3월 11일 독립기념관에 기증했다.

이 태극기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광복에 대한 염원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서명문에서 김구는 광복군을 도와달라고 매우사 신부에게 강하게 호소했다. “당신은 우리의 광복 운동을 성심으로 돕는 터이니 이번 행차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한인을 만나는 대로 이 의구(義句, 올바른 글)의 말을 전하여 주시오. 지국(止國, 망국)의 설움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인력·물력을 광복군에게 바쳐 강노말세(强弩末勢, 힘을 가진 세상의 나쁜 무리)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자.”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을 해체 및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태극기를 보자기처럼 이용해 쓴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된 게 특징이다.

광복군 관련 유물 네 건은 문화재로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태극기를 숨긴 인물이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白初月)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승려로 추정된다. 백초월은 3·1운동 직후 비밀 지하신문인 혁신공보를 발간해 독립의식을 고취시켰고 불교계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만주지역의 독립군 부대에 제공하는 등 국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인물이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태극기 보물 지정 예고를 계기로 역사·학술적 중요성이 널리 인정된 국가등록문화재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국보·보물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날 문화재청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및 축하문’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 등 네 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

글 이찬영 기자, 사진 문화재청

한미연합훈련의 묘수

● 김수한

헤럴드경제 기자
(북한학 박사·한국기자협회 남북통일분과위원회 간사)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7월 말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북한과 대타협'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한을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외교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상식의 틀을 깬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이 처음에는 당혹스럽게 여겨졌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로 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일깨워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4월 우리나라에 부임해 2018년 11월까지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2016년 한 해를 달궜던 북한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2017년 북미 간 전운 고조,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냉온탕을 자신의 임기 동안 모두 겪은 그야말로 베테랑이다.

그가 제안한 '남북미 동맹 전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는 것을 미국 세계전략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중국 고립전략의 일환이다. 여기에 '쿼드 플러스'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 또한 중국 고립작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아울러 미국은 쿼드를 과거 냉전시대 유럽에서 구 소련 견제를 위해 창설한 다자안보동맹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으로 확대·강화

한다는 복안마저 갖고 있다.

미·소 냉전시대 유럽에서 나토를 통해 구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 당시 미국의 지상 과제였다면 오늘날 미·중 신냉전시대를 맞아서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새 지상 과제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이든은 대중국 압박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고 있다.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중국 견제를 담은 공동성명 발표를 이끌어냈다.

'남북미 동맹' 제안한 브룩스 전 사령관

이런 와중에 브룩스 전 사령관의 남북미 동맹 전략 구상이 나왔다. 그는 틀림없이 북한을 광범위하게 구축된 대중국 포위망의 마침표로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도적 지원-종전협정-경제지원-평화협정' 순서로 나간다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남북미 동맹 로드맵은 현실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핵시설 폐기와 경제 정상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간 평화협정까지 담은 브룩스의 로드맵은 2년 전 하노이에서 이뤄졌을 뻔한 내용을 담았다는 얘기다.

물론, 북중 간 오랜 우호 관계를 하루 아침에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두 나라는 7월 11일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한 쪽이 침

**남측 의지대로 전작권 환수 일정을 정상 진행하면서 북측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새로운 작계 '50XX'를 이번 훈련에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공 당하면 다른 한 쪽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조약의 효력을 연장했다.

브룩스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북중 관계에 일단 틈이 좀 벌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오히려 북중을 더욱 밀착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초긴장 상태를 보인다. 3월과 8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김 위원장의 외부 동선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작전계획 5015'(Operation Plan 5015)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줄여서 '작계 5015'(OPLAN 5015)라고도 한다.

주한미군 작계는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가 총괄한다. 작계가 5000번대인 것은 미 인태사령부 작계라는 의미다. 작계는 시나리오별로 5026, 5027, 5028, 5029, 5030 등이 있으나 2015년 한미가 새로 만든 '작계 5015'가 가장 최신판이다.

남북미 모두가 원원하려면

5026은 한미연합군이 북한 핵시설을 신속 장악하는 내용, 5027은 북의 선제공격으로 전면전이 발생한 경우, 5028은 우발적 사건 발생에 따른 군사충돌을 저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한다. 5029는 북한에서 쿠데타나 대량탈북 사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5030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한미가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고사작전'에 해당된다.

이전까지 한미연합훈련은 5027을 중심으로 실시됐지만 전면전 외 요소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5027에 5026, 5029를 통합하고 일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만든 것이 5015다. 5015에는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북 지도부 제거를 위한 공격,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서는 필적 필 일이다. 더욱이 북한은 2020년 6월 9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지 413일 만인 7월 27일 통신선 복구에 나서 대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실제로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은 8월 1일 자신 명의로 이번 훈련에 대해 "배신적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

남측은 이런 식으로라도 이번 훈련을 꼭 실시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들었다. 정부는 내년 초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020년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2021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훈련이 축소, 연기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남측 의지대로 전작권 환수 일정을 정상 진행하면서 북측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새로운 작계 '50XX'를 이번 훈련에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 50XX에는 미국의 '중국 견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은 남북미 모두에게 환영받았을지도 모른다. ●



폴 세잔 '생트 빅투아르 산', 캔버스에 유화, 57.2×97.2cm, 1902~1906,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색과 형태는 한 몸... 그림으로 진리 일깨워

폴 세잔(1839~1906)은 인문학적 사고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그것은 그가 학창 시절 습득한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관계가 있다. 22세 때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미술의 길로 들어선 뒤 67세로 생을 다할 때까지 세잔은 사춘기 시절 갈고닦은 인문학 지식을 한시도 멀리하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만난 문사철(文史哲)은 세잔의 사고의 세계를 풍요롭게 살찌웠으며 훗날 그가 현대미술이라 불리는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바탕이 됐다.

체계적이고 우수한 인문학 교육은 내면에

서 꿈틀거리는 세잔의 성취 욕구를 수면 위로 힘차게 밀어 올렸다. 화가가 돼 그림으로 진리를 일깨우겠다는 욕망은 인문학 지식 덕분에 논리와 상상의 양 날개를 장착해 현대미술이라는 전대미문의 신천지를 향해 이륙할 준비에 들어갔다. 대학 입학 무렵 세잔은 희곡 대본을 직접 쓸 정도로 상당한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세잔이 육필로 기록한 다수의 시와 희곡 습작(習作)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세잔의 회화 이론은 3대 축으로 이뤄져 있

다. 그의 회화론은 인문학적 사유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 일반인에게 익숙한 '대상의 단순화'와 '다시점(多視點) 관찰법'은 말할 것도 없고 '색채와 형태 동일성의 법칙'도 논리 정연한 철학적인 고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정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색채와 형태 동일성의 법칙

특히 세잔이 '색채와 형태 동일성의 법칙'을 독창적인 회화 원리로 창안한 경위를 뜯어보면 그의 사고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

지 실감하고도 남는다. 색에 대한 세잔의 사고를 본인의 목소리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의 모든 것은 색깔을 갖고 있기에 색깔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이치상 자연스럽다. 즉 색과 형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색이 형태요, 형태가 색이다. 더욱 신기한 것은 색칠 작업을 진행할수록 형태도 차츰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색이 풍요로워질수록 형태도 탐스러워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상반되는 색의 병치와 둘 이상의 색이 서로 연결돼 사이 좋게 얹혀 있는 모습, 즉 색의 대비와 색의 조화는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색의 특성을 존재론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한 것도 놀랍지만 그 결과에서 형태의 근원적 본질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철학적 사고의 언급술사라 할 수 있다.

세잔의 이 같은 인문학적 사유는 사실(寫實)과 재현의 시대가 끝나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패러다임의 시대를 예고한 현대미술이 발아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세잔은 색으로 형태를 표현했고 색으로 원근법을 나타냈고 색으로 입체감을 창조했다.

세잔의 고향은 프랑스 남부 부슈뒤론주의 엑상프로방스다. 30년 가까이 고향 마을의 산을 탐구하며 자연의 본질 규명에 사활을 건 세잔은 90점이 넘는 ‘생트 빅투아르 산’ 연작을 남겼다.

세잔은 세상 모든 것의 원형을 추적하면 원과 원뿔로 귀착된다는 원형 동일성의 법칙을 ‘생트 빅투아르 산’ 시리즈에도 적용했다. 높이와 크기와 산세가 다르더라도 결국 ‘산은 산’일 뿐,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산의 원초적 모습만이 세잔의 관심사였다. 다양한 모습을 한 산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산을 기하학적으로 최소 분해하면 삼각형 모양

으로 압축된다. 우리가 산, 하면 떠올리는 형상이다. 집은 오각형 또는 사각형, 나무와 숲은 원형이나 사각형, 사다리꼴 혹은 마름모, 역사다리꼴로 형태상 본질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잔은 집 근처 생트 빅투아르 산을 강산이 세 번 바뀔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해 산 고유의 보편적 형태를 연작에 투사했다. 세상의 본질을 형태에서 찾은 세잔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본래의 모습, 그것만이 만고불변의 진실이라고 믿었다. 사물의 생성 순서를 거슬러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 극단적으로 분해한 형태는 단순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하고 또렷하게 드러났다. 자신이 그토록 매달린 사물의 본질을 형태에서 발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색만으로 그림의 완전체를 이뤄내

그렇다면 형태와 함께 조형의 양대 축인 색은? 여기서 세잔의 위대성이 발휘된다. 세잔은 ‘대상의 단순화’와 ‘다시점 관찰법’으로 형태의 본질을 파악한 뒤 자신이 개발한 ‘색채와 형태 동일성의 법칙’을 꺼내 들었다. 색과 형태는 한 몸이라 색으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세잔의 말. 세잔이 본질로 돌아간 형태의 살결 곳곳에 상반되는 색을 병치하고 둘 이상의 색을 어울리게 조화를 부리자 형태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원근감과 입체감까지 되살아났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1902~1906)은 세잔 말기에 그린 작품이다. 맨 앞쪽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빨간 색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을 거쳐 뒤로 갈수록 푸른색 계통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빨강은 초록, 파랑과 함께 빛의 3원색이다.

초록과 파랑은 빨강과 보색 관계라 서로 어울릴 때 상대의 존재감을 상승시킨다. 붓질을 대충 한 것 같은데 삼각형, 원형, 사각형 등 도형 모양의 화면 속 물체들은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색의 대비와 색의 조화로 형태를 결정짓는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 맨 결과다. 전면을 중심으로 화면 중앙까지 밀고 나간 붉은색 너머로 푸른색 계통을 배치해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로 향하도록 이끌었다. 빨강은 가까워 보이고 파랑은 멀어 보이는 색의 시각적 특징을 이용함으로써 원근감과 입체감, 공간 사이의 경계가 살아났다.

색으로 색을 말하면서 형태의 부각 효과는 물론 거리감에 이어 공간감까지 일석사조(一石四鳥)의 신비스러운 광경을 연출한 것이다. 전통 회화기법인 원근법과 세부 묘사 없이 색만으로 그림의 완전체를 이뤄낸 점이 놀랍다. 세잔의 이 업적은 현대미술의 시발점인 입체주의와 야수주의, 나아가 추상미술의 탄생으로 계승돼 그가 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생트 빅투아르 산’ 연작이 세잔의 ‘정물화’ 연작, ‘목욕하는 사람들’ 연작과 함께 현대미술의 여명(黎明)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 박인권 문화칼럼니스트

PIK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전 〈스포츠서울〉 문화레저부 부장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미술 전시 홍보, 이렇게 한다), 미술 연구용역 보고서 ‘미술관 건립·운영 매뉴얼’ ‘미술관 마케팅 백서’ 등이 있다.

BTS의 음악은 한국적인가?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총 10주간 1위를 지키며 믿을 수 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BTS 열풍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몇 년째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무엇보다 팝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서 안착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약 20년간 이어온 소위 '한류'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BTS의 성공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그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다이너마이트(Dynamite)> <버터(Butter)>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같은 영어 곡의 미국 시장 성공을 한류나 K-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더 나아가 이런 음악에서 우리가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 K-팝에서 한국성이란 무엇일까? 그런 것이 있기는 할까?

대중 음악인으로서 '한국성' 고민

서구에서 유래한 대중음악의 어떤 것이 한국적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한때는 우리 고유의 선율이나 음계 탐구로 접근하기도 했다. 서구의 팝이나 록의 문법이나 양식을 따르되 우리나라의 전통 음계나 선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중현은 오음계의 선율을 록에 적용했고 서태지나 신해철 등은 국악기를 적극 활용해 실험적인 편곡을 선보였다. 물론 김수철처럼 대중음악과 국악의 경계를 무너뜨려 완전히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 사례도 있다.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 대중 음악인으로서 '한국성'을 제각각 고민했던 사례라 하겠다.

퓨전 국악이나 조선 팝 같은 새로운 흐름이 아이돌 위주의 K-팝에 대안이 된다고 보는 쪽도 있다. 국악이나 국악기에 기반을 두지만 그 어떤 장르에 종속되길 거부하는 초월적 음악성을 선보였던 잠비나이나 국악을 우리나라를 넘어 새로운 세계 음악의 하나로 낯설게 바라봤던 두번째달 등은 분명 가능성을 보여줬다. 판소리를 재해석해 키치적인(대중 취미적인) 재미를 더하고 퍼포먼스로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인 이남치의 <뽀빠이>는 K-팝 시대에 한국성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의 유쾌한 대답이었다.

최근에는 서도밴드나 비단 등 국악을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해 K-팝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의 장르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들의 잠재적 청자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에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우리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넘어 세련된 음악으로서 국악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BTS의 〈퍼미션 투 댄스〉는 팬데믹 와중에 좌절을 느끼고 희망을 갈망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위로의 곡이다. | 유튜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편적인 인류애에 관한 노래를 서구의 아티스트가 아닌 우리나라의 BTS가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평화와 화합을 사랑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한국적'인 메시지가 또 있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BTS의 음악은 한국적인가? 물론 지금까지 BTS가 보여준 음악에 퓨전 국악이나 조선 팝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 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악의 리듬과 악기를 활용하고 뮤직 비디오에 전통 문양과 건축을 비롯해 다양한 상징이 등장하는 〈아이돌(IDOL)〉은 K-팝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적'인 곡이다. 2018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삼고무, 탈춤 등 전통음악으로 재해석한 〈아이돌〉의 공연은 K-팝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이었다.

BTS 멤버 슈가는 조선의 군례악인 대취타를 힙합과 결합시킨 〈대취타〉를 발표했고 이는 BTS가 우리나라 그룹으로서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신으로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BTS가 가진 '한국성'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재해석한 것에만 있는 것일까?

보편적인 인류애에 관한 노래

조선시대 유행한 전통이나 옛 선조들의 미학만큼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철학 역시 한국적인 것이다. 세계 시민으로 보편타당한 현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은 의식적으로 우리나라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지극히 한국적일 수밖에 없다. 영화 〈기생충〉이 현대 우리나라 사회의 모순을, 〈미나리〉가 미국 내 한국 이민자들의 삶을 각각 인류의 보편타당한 관심사로 끌어올린 것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BTS가 가진 역할도 다르지 않다.

BTS의 〈퍼미션 투 댄스〉는 이전처럼 한국성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국적인 K-팝이라 불러 마땅하다. 코로나19 와중에 좌절을 느끼고 희망을 갈망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위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이지만 곡의 내용은 지극히 한국적인 경험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현대인의 경험이다. 아니, 정말 그 같은 구분이 필요한 것일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편적인 인류애에 관한 노래를 서구의 아티스트가 아닌 우리나라의 BTS가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평화와 화합을 사랑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한국적'인 메시지가 또 있을까? ●



● **김영대 음악평론가이자 문화연구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K-팝 연구로 음악학(Ethnomusicology)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BTS: The Review〉 등이 있다.

공감 리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주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마음먹고 시작한 걷기 운동도 얼마 하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생긴다. 이번호에 실린 '행복을 유예하지 말자'는 나태 주 시인의 글을 대하며 위안을 가져본다. 많은 날을 살아오면서 "행복은 멀지 않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 이제야 마음을 울린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껴보자는 시인의 말 또한 공감이 간다. 그리고 '행복은 절대로 유예하지 말자, 남의 것으로 미루지 말자, 작은 것이고 내 가까이 있는 무엇이다'라는 글귀를 고마운 마음으로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새겨본다.

이동렬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4등이면 어떤가요? 즐기며 달렸고 가능성을 봤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뛸 힘이 납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이 한마디가 감동입니다.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스스로없이 축제를 즐긴 모습도 감동입니다. 특히 이번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수들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멋진 경기로 4강 기적을 이뤄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 모두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고맙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멋진 활약을 응원합니다.

김지윤 경남 양산시 양주로

사진 공감



아이들 여름방학이면 시골 부모님 댁에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전화만 드립니다. 어제는 텃밭의 옥수수농사가 아주 잘 됐으며 부지런히 다듬어 택배로 부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왠지 마음이 짙해집니다. 어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요.

이선호 서울 도봉구 마들로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www.instagram.com/wegonggam

1boon.kakao.com/weekly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post.naver.com/mcst_pr

blog.naver.com/mcst_pr

ridibooks.com

digital.kyobobook.co.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거나, 사진마을 참여마당(http://photovi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2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철은 모두 옳다」

건강한 8월의 지금

영양을 위한 농부들의
보다 나은 농식품부+

제품 농산물 원보는
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눈의 비결 당근

✓ 태양의 기운 가득한 당근

태양을 연상시키는 주황 빛깔 채소 당근은 특유의 아식황과 건강함으로 모든 요리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녹황 채소이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함유되어 눈을 건강하게 하며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및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면역력 향상,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리코펜 성분이 풍부하다.

보관법과 당근 레시피

신문지에 싸 후 냉장보관하며 습기를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당근샐러드

당근주스

당근칩



올곧 붉은 복숭아

✓ 피로 회복 복숭아

풍부한 과즙, 달콤한 향기, 아름다운 붉은 빛깔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복숭아는 과육의 색과 단단함에 따라 크게 백도와 황도로 분류된다.

알칼리성 식품인 복숭아는 종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돋우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 펙틴 등은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어 아열을 풀어준다.

고르는 법과 복숭아 레시피

상처가 없고 색이 선명하며, 털이 매끈하며 향기가 강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복숭아샐러드

복숭아스무디

복숭아샐러드



운전 안전띠

접종 마스크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예방접종 전과 후에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는 안전띠 착용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